

# 광주, 육아수당 488억...전남, 보건·복지 2조7188억

### 역대 최대 편성 광주·전남도 내년 예산 어디에 얼마나 쓰나

#### 2년간 매월 20만원씩 육아수당 미래 먹거리 산업에 1238억원 결혼 2000쌍 축하금 200만원씩 공익직불금 자금 4759억원 배정

광주시와 전남도가 2020년 예산안에 비해 각각 10.0%, 12.8% 증액된 2021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이 큰 폭으로 증액된 것이 그 원인으로, 지역 맞춤형 자체 사업 발굴과 함께 국회에서 연구개발(R&D), 필수 기반시설, 미래 기간산업 분야 관련 추가 예산 확보가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이 낳기 좋은 광주와 미래 먹거리 성장 산업 육성=내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코로나19 여파 등에 따른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고,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예산을 대폭 반영한 점 등이 눈에 띈다.

시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막대한 지출로 살림이 빠듯한 상황에서도, 출생 육아 수당 48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내년부터는 광주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첫째의 경우 출산 축하금 100만원과 매월 20만원씩 육아수당을 24개월간 받게 된다. 시는 또 광주형 사후관리 공공서비스 구축과 청년부부의 난임 건강 검진비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등에 총 2280억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소진된 재해·재난대비기금을 충당하기 위해 711억원 규모의 재해·재난 재원을 추가 확보했으며, 따뜻한 광주 만들기 사업으로 긴급복지 지원 확대 144억원, 최종중 발달장애인 지원 28억원, 경로당 와이파이 이용료 2억원 등을 배정했다.

시는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이끌고 있는 인공지능(AI) 중심도시 만들기 사업에는 정부 예산 718억원 등 89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141억원, 지역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18억원, 인공지능유치기초교육지원 10억원 등이다.

시는 광주의 미래를 책임질 11대 미래 성장산업에도 예산을 집중 배정했다. 전년대비 67억원 증액된 1238억원을 책정했는데,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 200억원, 친환경자동차부품인증센터 구축 51억원, 마이크로의료로봇개발지원센터 57억원, 수소충전소구축 30억원, 에어가전 혁신지원센터구축 10억원, 시니어코스메틱케어 실증센터 10억원 등이다. 시는 광주형 3대 뉴딜사업인 디지털 뉴딜,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 광주형 일자리를 바탕으로 한 휴먼 뉴딜 실현을 위한 사업비로 656억원을 배치했다.

문화관광산업 육성도 빼놓을 수 없는 주력사업 중 하나다. 시는 공공도서관 건립 135억원, 광주 실감콘텐츠큐브 조성 116억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지원 68억원, 광주문화관 건립 24억원

등 광주다움 회복과 품격 있는 문화광주 조성을 목표로 총 630억원을 배정했다.

◇2020년 8조, 2021년 9조, 2022년 10조 시대 여는 전남도=전남도의 2021년 예산 총규모는 9조2023억원이다. 2020년 정부예산안 8조1588억원에 비해 1조435억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가 7조3250억원에서 8조2548억, 특별회계가 8338억에서 9475억으로, 각각 9298억원, 1137억원이 늘었다. 이처럼 가파른 상승세는 국고보조사업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해양, 보건복지, 환경 등에서 국고보조사업이 4조708억원에서 4조8194억으로, 무려 7486억원이 더해졌다. 이에 따라 도비를 829억원이나 더 부담해야 된다.

자체사업은 7430억원에서 430억원이 늘어나는데 그쳤고, 소방(579억원), 의료급여(260억원), 학교용지부담금(153억원) 등 특별회계 역시 1137억원이 증가했다.

전남도의 주요 신규시책은 결혼·출산지원, 노인·청소년 등에 맞춰져 있다. 우선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으로 2000쌍에게 각각 200만원씩 지급할 40억원, 3자녀 이상 다둥이가정 1000가구 50만원씩 5억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3억원, 대불국가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43억원, 학교밖 청소년 참여수당 6억원, 청소년지원센터 건립 56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일반회계(8조2548억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보건·복지(2조7188억원)였으며, 농림해양(1조8014억원), 일반행정(1조364억원), 지역개발(6380억원), 일자리·경제(3677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121년 전남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701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452억원), 공익직불제(4759억원), 농어민 공익수당(594억원), 어촌뉴딜 300사업(1799억원), 문화관광 지원개발(372억원), 전국체전 주경기장 신축지원(110억원), 코리아 토탈관광 패키지(114억원), 도시재생사업 지원(457억원) 등이다. 여기에 호남권 평화통일센터 건립(70억원),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추진(69억원) 등도 포함됐다.

전남의 2021년 연구개발(R&D) 사업은 모두 56개로, 예산은 1726억원이다. 전년도에 비해 14개 사업(468억원)이 늘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는 이를 바탕으로 민선 7기 새천년 비전인 '정전 전남 블루이코노미'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R&D 사업으로는 선박용 LNG혼소와 무탄소 연료 적용기술 개발(70억원), 중대형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50억원), 첨단 정밀의료산업화 플랫폼 구축(50억원), 국가 면역치료 혁신 플랫폼(54.5억원), 지능형 LVDC(저압직류) 핵심기술개발사업(67.4억원),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전기자동차 개방형 공용플랫폼 개발사업(90억원),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개발(100억원) 등이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경기 광명시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에서 열린 개원식에 참석해 행사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빨라지는 정세균의 대권행보...총리 교체 개각 앞당겨지나

### 영남 민심 쟁기며 정치권 스킨십 연말·연초 2단계 순차개각 유력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걸음이 부쩍 빨라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대권 레이스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과 함께, 이런 흐름이 내년초 총리 교체를 포함한 큰 폭의 내각 개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폭 넓히는 정총리...양강구도에 변수 되나=정 총리는 지난 9일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했다. 국회의와의 협치 의지를 되새기는 자리지만, 정치권에서는 정 총리가 의원들과 '식사정치'를 통해 스킨십을 늘리는 데 주목하는 분위기가.

거듭되는 영남 방문 역시 예사롭지 않다. 지난달 16일에는 부산을 찾아 김해신공항과 관련해 "부산·

울산·경남 800만 시민들의 간절한 여망이 외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고, 지난 7일에는 포항을 찾아 "나는 포항의 사위"라고 했다. 정 총리의 부인 최혜경 여사는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운동가 최홍준 선생의 딸로, 포항 흥해읍에서 태어나 자랐다. 정 총리는 11일에도 부산항을 방문키로 하는 등 영남 민심 끌어안기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여권 관계자는 10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 판결 이후 여권은 '이난연-이재명' 양강 구도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는 분위기"라면서도 "정 총리가 새로운 변수로 부상할지 지켜볼 대목"이라고 말했다.

◇2단계 개각...연초 대폭개각 전망=정 총리의 행보가 빨라지면서 총리 교체 일정도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여권에서는 정 총리의 2월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직후 차기 대선 레이스에 사동이 걸리는 정치 스케줄에 따른 것이다.

이런 흐름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각 구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연말에 한 차례, 연초에 한 차례로 나눠서 장관들을 교체하는 2단계 순차개각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 내에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일부 부처만 개각하고, 4월 보궐선거 출마자를 포함해 다수의 장관을 연초에 교체한다는 것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주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경우 연초 개각을 통해 거취가 정리될 공산이 커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현미 장관의 경우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 유임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연초 개각을 통해 문재인 정부 마지막을 책임질 3기 내각의 라인업이 완성될 것"이라며 "이런 개각 흐름과 정 총리의 대권행보 스케줄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2월에 총리가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 "지역균형뉴딜은 수도권과 격차 해소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사업"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 광주서 '한국판 뉴딜 경청 대토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10일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대토론'을 열어 한국판 뉴딜의 갈 길을 모색했다. 한국판 뉴딜을 어떻게 실현할지 답을 지역에서 찾고, 지역 차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소통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조대업 정책기획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판 뉴

딜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명사적 위기에 대응하는 시대적 과제이자 문재인 정부 최대의 종합적 국정과제로 간주한다"며 "한국판 뉴딜이 지역의 좋은 삶에서 정의로운 전환과 세계 선도성의 표준을 만드는 새로운 지역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회식에 이어 조 위원장은 '한국판 뉴딜과 세계 선도국가'라는 주제의 기조 발제를 했으며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디지털 뉴딜'을 주제로 강연했다.

조 위원장은 '한국판 뉴딜과 세계선도국가'라는 주제의 기조 발제에서 지역균형 뉴딜과 관련해서

"지역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국토공간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장석영 과기부 제2차관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디지털 뉴딜'이라는 주제 강연에서 "앞으로 AI(인공지능) 융합 및 인프라 확충, AI 및 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AI 반도체 경쟁력 확보,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충, 디지털 포용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